



2023.01.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최세중 경제분석관

작성 | 진익 경제분석국장

이규민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경수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관	최세중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의 정리·분석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 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하여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에너지 위기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II장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III장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금융), IV장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재정), V장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투자), VI장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수출), VII장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인구), VIII장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1

1. 검토 배경	1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3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5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8

II.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 15

1. 검토 배경	15
2. 현황	16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22
4. 현안 분석	24
5. 요약 및 시사점	36

III.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 43

1. 검토 배경	43
2. 현황	4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46
4. 현안 분석	47
5. 요약 및 시사점	66

IV.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 67

1. 검토 배경	67
2. 현황	68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75
4. 현안 분석	76
5. 요약 및 시사점	85

V.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 87

1. 검토 배경	87
2. 현황	8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91
4. 현안 분석	94
5. 요약 및 시사점	100

VI.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 107

1. 검토 배경	107
2. 현황	10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17
4. 현안 분석	119
5. 요약 및 시사점	128

VII.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 131

1. 검토 배경	131
2. 현황	133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38
4. 현안 분석	140
5. 요약 및 시사점	151

VIII.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 153

1. 검토 배경	153
2. 현황	15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57
4. 현안 분석	158
5. 요약 및 시사점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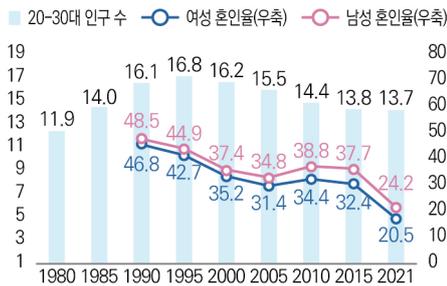
Ⅶ.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혼인은 최저치를 기록

- 2021년 출생아 수는 26.1만명, 혼인건수는 19.3만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만명에서 50년 만에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혼인건수는 1996년 정점(43.5만건)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
 -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는 연간 10.3%씩 감소하여 출생아 수 감소율 7.2%보다 빠르게 감소
- 혼인건수는 젊은 층 인구 수와 혼인율의 영향을 받으며, 2000년부터 젊은 층(20~30대) 인구 수가 감소하고, 이들의 혼인율은 2010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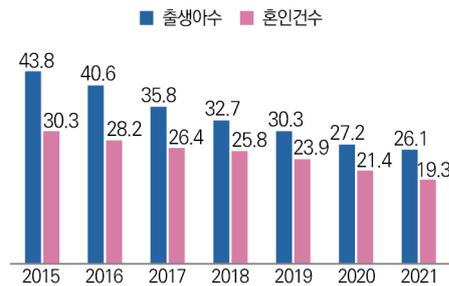
[20~30대 인구 수 및 성별 혼인율]

(단위: 백만명,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단위: 만명, 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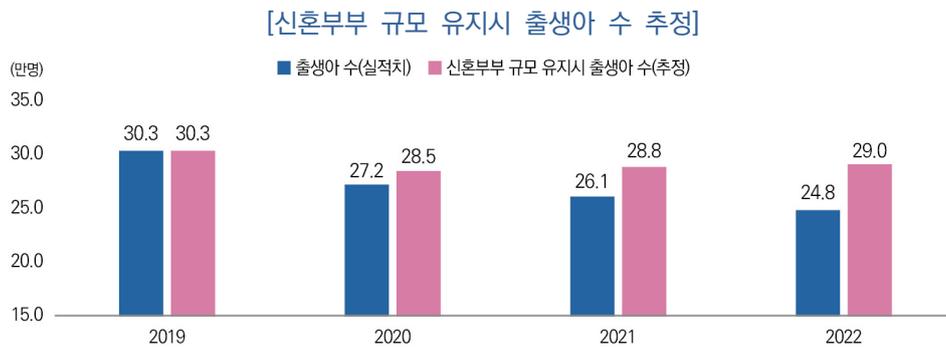
주: 성별 혼인율은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혼인감소는 1인가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

-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안정이며, 주택가격 상승,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 하락 등도 혼인 감소의 요인임
 - 청년(15~29세)의 첫일자리는 1년이하 단기계약직 비중이 높고, 청년 실업률은 30세 이상 연령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편임
- 혼인 감소는 젊은 층의 1인가구 증가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1인가구의 증가는 미혼청년층의 자산축적 여력을 감소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강화시킬 가능성

□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하락보다는 혼인 감소에 주로 기인

-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5만명) 중 77%(4.2만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 혼인의 감소로,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7만쌍에서 2022년 106.2만쌍으로 감소하였으며, 신혼부부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침
-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되었다면, 2022년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2만명 많은 29.0만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 향후 혼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출생아 수 또한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주: 1. 신혼부부 규모 유지시 출생아 수는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출생아 수를 의미
 2. 실적치 중 2022년의 값은 1~11월 누적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는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

-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초저출산 정책에 혼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가정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VII.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진행

-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인구 수 또한 최근 감소세로 전환
 -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¹⁾은 0.81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5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²⁾
 - 고령인구의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³⁾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부터,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전환
- 이러한 인구위기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김경수 외(2021)는 OECD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임⁴⁾
 - 김지연 외(2022)는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⁵⁾
 - 국회예산정책처(2022)는 급격한 인구변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⁶⁾

김상미 경제분석관(sangmi@assembly.go.kr, 02-6788-4752)

유근식 경제분석관(gsyoo@assembly.go.kr, 02-6788-4753)

- 1)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V」, 2022.10
- 3)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의미하며, 초고령사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
- 4) 김경수·허가형·유근식·김상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12
- 5) 김지연·정규철·허진욱,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KDI, 2022.11
- 6)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8

- 국회 및 정부는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국회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 등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 하락

- 1~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문제 인식 및 정책 초점을 바뀌 가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행⁷⁾
 - 1차 계획은 저소득 가정 지원 및 정부 주도의 보육지원, 2차 계획은 일·가정 양립에 종합적 접근, 3차 계획은 청년일자리 및 주거 등에 대한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4차 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함
-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⁸⁾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감소현상을 살필 필요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혼인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 수 감소 및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기준 약 97%의 출생아 법적 혼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짐
 - 따라서, 최근의 급격한 혼인 감소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
- 이에 보고에서는 혼인의 최근 추세를 제시하고 혼인 감소의 원인과 영향을 살펴 정책적으로 혼인 기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함

7) 김우림,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1.8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

2. 현황

가. 저출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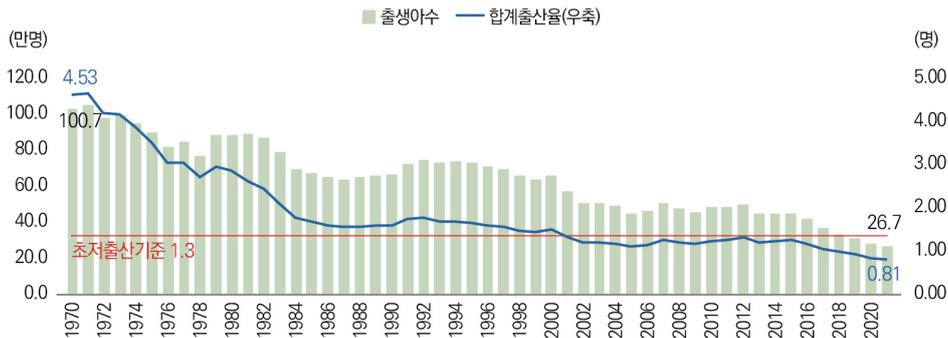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1명 미만 지속

- 1970년대 초반 4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를 거쳐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 초저출산 국가⁹⁾가 되었고 2005년에는 1.09명까지 하락
- 이후 반등하여 2012년 1.30명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 지속
 -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¹⁰⁾

□ 출생아 수는 출산율 하락 및 부모세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

- 1970년 100.7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1만명을 기록하여 50년만에 1/4 수준으로 감소
- 출생아 수는 1970~2000년 사이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3.0%, 2010년 이후 감소율은 5.2%로 나타나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그림 VII-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9) 초저출산 국가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국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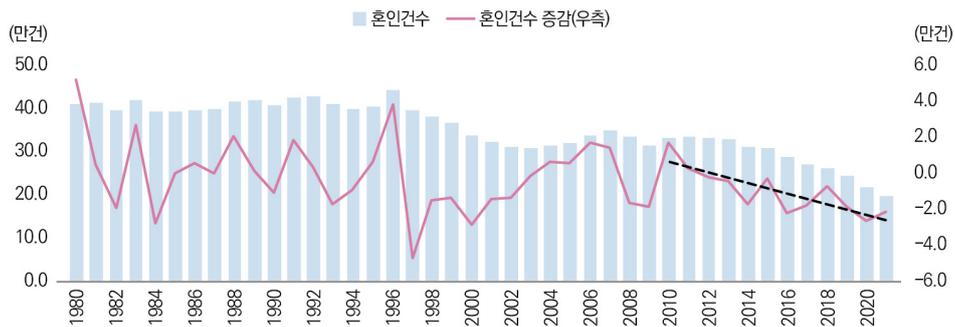
1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2022

나. 혼인감소 현황

□ 혼인건수는 2010년 들어 추세적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감소세도 점차 확대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40만건 수준의 혼인건수가 지속되었고 1996년 정점(43.5만건) 이후 2003년 30.3만건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반등
- 2010년 초반부터 혼인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0만명대로 떨어진 혼인건수는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 19.3만건을 기록 - 특히, 2010년 이후 혼인건수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 (그림 VII-2의 검은색 점선 참고)

[그림 VII-2] 혼인건수 및 증감 추이



주: 검은색 점선은 2010년 이후 전년대비 혼인건수 증감의 추세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건수의 감소는 인구 감소와 혼인을 감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인구의 감소는 혼인 대상자를 감소시켜 혼인건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인구 수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 혼인건수는 감소할 수 있음
- 인구 감소와 혼인을 하락(비혼율의 상승)은 혼인건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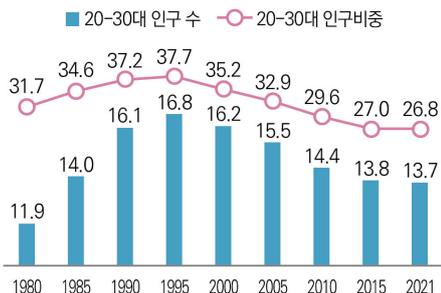
□ 2000년부터 젊은 층(20~30대)의 인구 수 및 비중 감소

- 1980~1995년 기간 동안 주된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
 - 20~30대의 인구 수는 1980년 1,188만명에서 1995년 1,681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비중이 1980년 31.7%에서 1995년 37.7%에 이룸
 - 그러나 2000년 이후 20~30대 인구 수는 감소하여 2021년 1,364만명으로 총인구의 26.8% 수준으로 감소하여 1995년 대비 10.9%p 하락

□ 젊은 층(20~30대)의 혼인율¹¹⁾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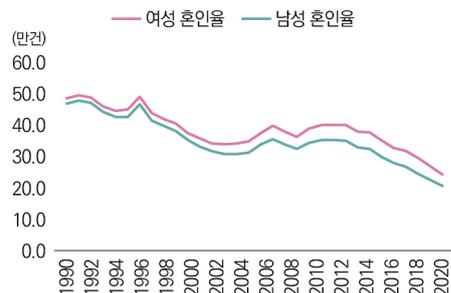
- 젊은 층의 혼인율은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크게 하락한 이후 2010년 초반까지 소폭 반등
 - 20~30대 여성 혼인율은 90년대 초반 약 50건(인구 천명당)에 달했으나 1997년 이후 하락하여 2003년 33.8건까지 떨어진 후 소폭 반등
 - 동 기간, 20~30대 남성 혼인율은 여성 대비 소폭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2010년대 중반 이후 혼인율은 급격하게 하락
 - 2013년 20~30대 여성 혼인율은 인구 천명당 40건, 남성 혼인율은 35.1건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2021년 여성은 24.2건, 남성은 20.5건을 기록

[그림 VII-3] 20~30대 인구 수 및 비중
(단위: 백만명, %)



주: 총인구 중에서 20~39세 인구의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VII-4] 20~30대 혼인율
(단위: 인구 천명당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11) 혼인율은 '해당 연령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정의하였으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자체 추정한 수치를 활용하였음

다. 만혼과 미혼율

□ 2021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은 33.4세, 여성은 31.1세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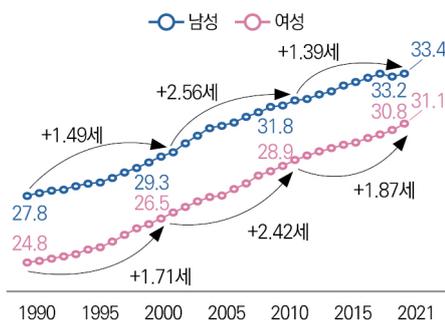
-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으나, 2021년에는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31년 동안 남성은 5.6세 여성은 6.3세 증가
 - 평균 초혼연령 증가폭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0년대 남성 1.49세, 여성 1.71세, 2000년대 남성 2.56세, 여성 2.42세, 2010년대 남성 1.39세, 여성 1.87세로 2000년대가 가장 크게 증가
 - 평균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선 시점은 남성 2003년, 여성 2015년임

□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상승

- 연령대별 미혼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25~29세 연령의 미혼율은 87.4%, 40~44세 연령의 미혼율은 21.0%에 달함
 - 1990년 30~34세 연령인구 중 미혼인구 비중은 9.7%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56.4%로 상승하여 해당연령대 인구의 반 이상이 미혼상태임
 - 주된 혼인 연령대를 넘어선 만 40~44세 인구 중에서 미혼율은 1990년 1.3%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21.0%로 다섯명 중 한명이 미혼상태임
- 혼인이 늦어짐에 따라 미혼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40~44세의 미혼율의 증가는 전반적인 비혼의 증가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

[그림 VII-5] 성별 평균 초혼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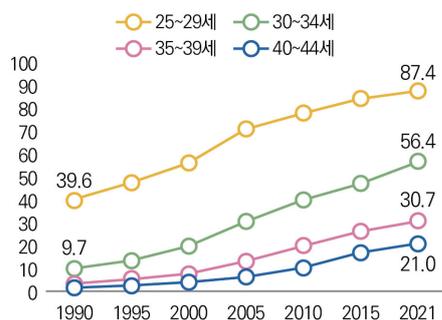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VII-6] 연도별 연령대별 미혼율

(단위: %)



주: 미혼율 = (미혼인구 수 ÷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학력별 미혼율 살펴보면, 최근 20년 동안 모든 학력구간에서 미혼율이 상승**

- 만 40~44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수준별 미혼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미혼율은 2000년 3.6%로 대졸자(3.0%)와 유사했으나, 2020년에는 23.8%로 크게 상승
 - 교육수준은 소득 등 경제적 상황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소득 등 경제불안의 영향으로 미혼율이 상승했을 가능성 존재

[표 VII-1] 만40~44세 성인의 학력별 미혼율 추이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20
고졸	3.6	6.8	11.1	17.1	23.8
대졸	3.0	4.8	9.4	14.3	17.9
대학원졸이상	3.6	5.5	9.3	11.7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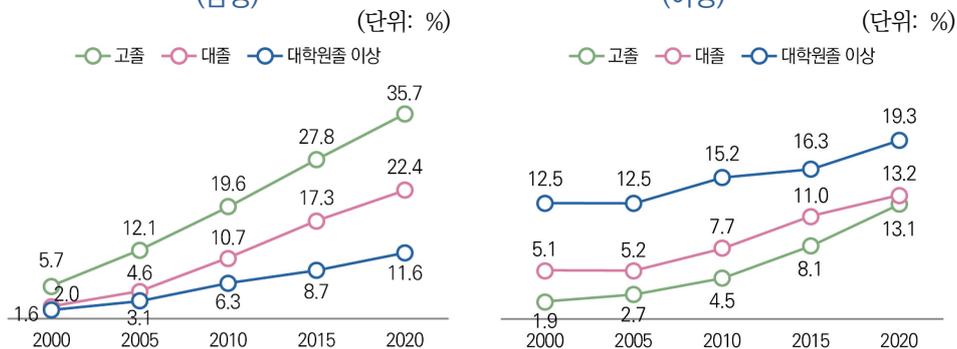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

-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율이 낮고,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율이 높은 가운데, 남녀 모두에서 저학력(고등학교 졸업)의 미혼율 상승 폭이 컸으며, 특히 남성 저학력의 미혼율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함

[그림 VII-7] 성별 학력별 미혼율(만40-44세)

(남성)

(여성)



주: 미혼율 = (미혼 인구 수 ÷ 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4대 분야별 주요과제' 발표(2022.12)

- 4대 분야는 인구감소추세를 완화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
 - ① 경제활동인구 확충: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 자본 생산성 제고
 - ② 축소사회 적응: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 ③ 고령사회 대비: 복지시스템 안정성(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 ④ 저출산 대응: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 또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입장

[표 VII-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4대분야별 주요과제 및 6대 핵심과제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			
1. 경제활동인구 확충	2. 축소사회 적응	3. 고령사회 대비	4. 저출산 대응
6대 핵심과제		관련 분야	
①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경제활동인구 확충 · 저출산 대응	
②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 경제활동인구 확충	
③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고령사회 대비 · 저출산 대응	
④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 고령사회 대비	
⑤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 축소사회 적응	
⑥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 공통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

□ 부모 또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

- 정부는 ① 고용불안, ② 주거부담, ③ 출산·육아부담, ④ 교육경쟁 심화, ⑤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저출산의 5대 주요원인으로 지정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6대 핵심과제 중 저출산과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 정부가 제시한 핵심과제들은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정책의 방향이 출산·육아에 집중된 경향
 - 2022년 초 정부는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강력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¹²⁾
 - 2022년 12월 발표된 정책과제에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주거관련 대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사업계획은 제한적
- 정부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3년 중 수정하겠다고 발표

[표 Ⅷ-3] 2023년 주요 정책 캘린더: 인구위기 대응 관련

정책과제	부처·기관	비고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	금융위	상반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추진	교육부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한 청년 17만+a 지원	고용부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 위한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기재부	
생활인구 개념 도입(1월)	행안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쿼터(11만명) 신속입국 추진	고용부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	여가부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6월)	고용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제한 완화 추진(12월)	고용부	하반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보완	복지부·저고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 방향」, 2022.12

12) 관계부처 합동, 「제4기 인구정책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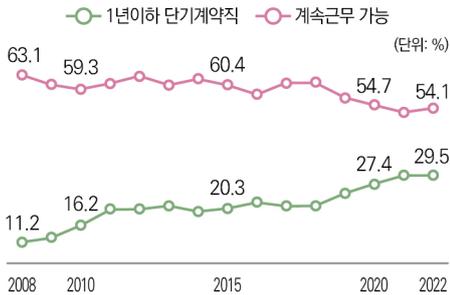
4. 현안 분석

가. 혼인 감소의 원인

□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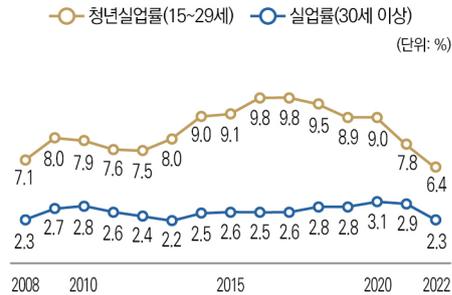
-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은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혼인으로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상용직·정규직, 대기업에 고용된 경우 결혼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¹³⁾
- 청년(15~29세)의 첫일자리 근로형태는 1년 이하 단기계약직인 경우가 2008년 11.2%에서 2022년 29.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상대적 고용 불안정성이 큰 편임

[그림 VII-8] 청년의 첫일자리 근로형태



주: 청년은 15~29세를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림 VII-9] 청년 및 30세 이상 실업률



주: 청년은 15~29세를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3) 김경수·허가형·김윤수·김상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8
 고용형태와 결혼확률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 경우 결혼확률이 4.35%p
 정규직일 경우 1.16%p, 사업장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3.23%p 증가

	모형1: 종사상지위		모형2: 정규직여부	모형3: 사업장규모 (1,000명이상)
	상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결혼확률 영향	4.35%p*** ↑	5.41%p ↓	1.16%p*** ↑	3.23%p*** ↑

주: 1. 종사상지위의 기준변수는 임시/일용직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변수는 비정규직, 사업장 규모의 기준변수는 50명 미만 사업장임

2.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정형성의 필수 비용 증대로 혼인을 지연시키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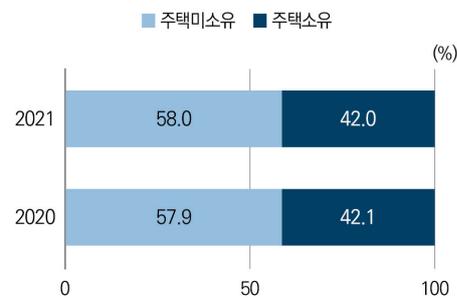
- 2021년에 결혼한 20~44세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시 부담/힘들었던 점을 설문한 결과 1위는 주택마련(55.0%)으로 나타남¹⁴⁾
 - 2위인 코로나19로 인한 제한/규제(15.6%)보다 응답 비율이 39.4%p 높음
- 주택매매가격이 2배 상승하면 조혼인율은 0.33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¹⁵⁾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조혼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이 2배 상승하면 조혼인율은 0.33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2배 상승하면 조혼인율은 0.19건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I-10]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VII-11]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현황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존재¹⁶⁾
 - 2009~2021년 16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은 0.2명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최장 7년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며, 충격 발생한 5년 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4)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의 설문결과로 결혼 준비 시 부담/힘들었던 점으로 주택마련(주택가격, 크기, 종류 등)이 55.0%,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제한/규제 15.6%, 결혼식준비(예식장, 예복, 사진촬영 등) 12.6%, 거주지 선정(위치, 부모님 동거여부 등) 8.7%, 혼수/예물/예단 4.8%, 집안간 가치관. 종교 등의 차이 2.6%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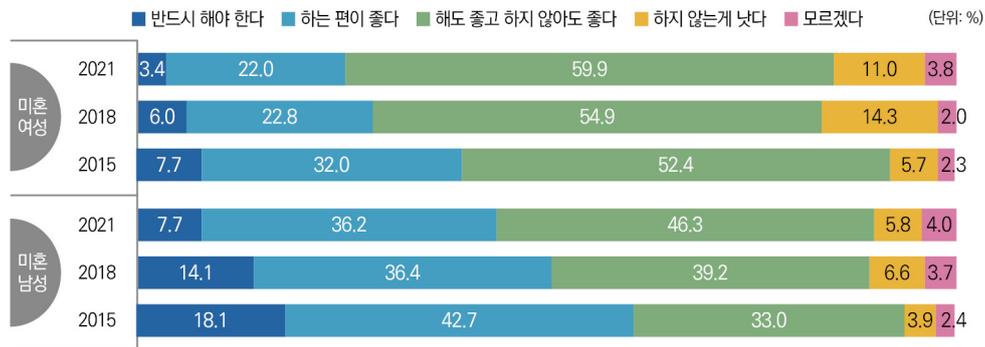
15) 강동익·송경호,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함의”, 조세재정연구원, 2021

16) 박진백,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2

□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은 하락

- 미혼남녀(만 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미혼여성은 2015년 39.7%에서 2021년 25.4%로, 미혼 남성은 2015년 60.8%에서 2021년 43.9%로 감소

[그림 VII-1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15~2021년)



주: 미혼남녀의 연령은 2015~2018년도는 20~44세, 2021년도는 19~49세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각년도

- 미혼인구의 증가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택, 소득, 결혼비용 등의 사회·경제적요인으로 결혼의향이 감소함을 밝힘
 -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결혼여부가 결정되고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결혼격차(marriage divide)로 정의한 연구도 존재¹⁷⁾
 - 임금 근로 중인 비혼 여성들은 경제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¹⁸⁾

17) Wilcox, W. B., HMRF Research Brief: The Marriage Divide, Marriage Penalties, and United States Welfare Policy, Oklahoma City, OK: Public Strategies, 2020

18) 김소정, "임금근로 비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2022, 53.2: 3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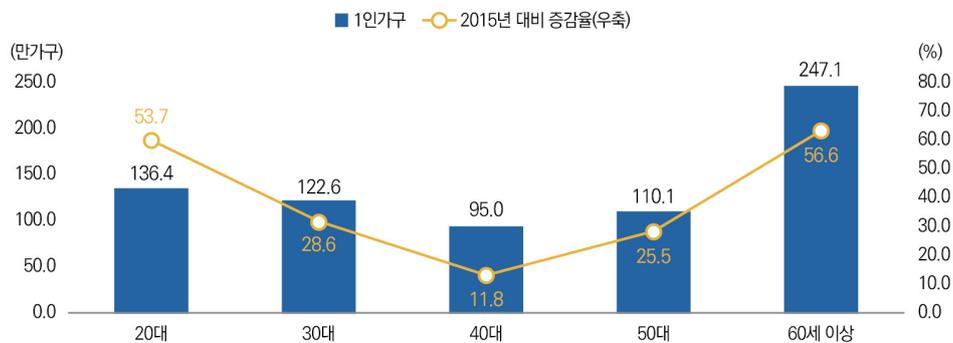
나. 혼인 감소의 영향

(1) 1인가구 증가

□ 최근 20~30대의 1인가구 규모가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2015년 520.3만가구에서 2021년 716.6만가구로 증가
 - 2021년 기준,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4%로 2015년(27.2%) 대비 6.2%p 상승¹⁹⁾
- 1인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청년층(20대)과 30대, 고령층(60세 이상) 등에서 크게 증가
 - 청년층 및 30대의 1인가구 증가는 비혼 및 만혼 현상을 반영
 - 2021년 기준 20대 1인가구는 136.4만가구로 2015년 대비 53.7% 증가하였고, 30대는 122.6만가구로 2015년 대비 28.6% 증가
 - 동 기간, 20대 인구 중 1인가구 비중은 13.8%에서 21.0%로 7.1%p 상승하였고, 30대의 비중은 12.9%에서 18.9%로 6.0%p 상승²⁰⁾

[그림 VII-13] 2021년 1인가구 수 및 2015년 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9) 1인가구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의 비중을 의미

20) 내국인 인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을 의미. 통계청의 1인가구 통계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인구를 바탕으로 1인가구 비중을 제시하였음.

□ 젊은 세대의 1인가구 증가가 비혼 및 만혼 현상을 강화시킬 가능성

- 2021년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연간소득은 전체가구 평균 연간소득의 42.0% 수준인 반면, 1인가구의 평균 소비수준은 전체가구의 56.5%에 달함
 - 1인가구는 혼자서 주거 등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전체가구 대비 높음
 - 2021년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2,691만원, 평균소비는 약 1,691만원으로 평균소비성향은 62.8%이며 전체가구의 46.7% 대비 16.2%p 높음

[표 VII-4] 1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과 소비지출(2021년 기준)

	소득 (A)	소비지출 (B)	평균소비성향 (B/A*100)
1인가구	2,691만원	1,691만원	62.8%
전체가구	6,414만원	2,994만원	46.7%

주: 소비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시된 월평균 소비지출을 연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최근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부족'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미혼 청년층의 자산축적 여력을 감소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강화시킬 가능성
 -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부족'이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1인가구 중 50% 이상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1인가구 증가는 미혼 청년층의 자산축적 여력 감소로 이어져 비혼 또는 만혼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출생아 수 감소

□ 출산의 대부분이 혼인부부에 의해 이뤄지므로 혼인은 출생의 선행지표로 작용

- 부부형태가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혼인을 통해 부부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출산은 혼인 부부로부터 발생
 - 2020년 OECD 주요국의 전체 출산 대비 비혼 출산 비중을 살펴보면, 칠레 75.1%, 프랑스 62.2%, 미국 40.5%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비혼 출산 비중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2021년 기준 3.0%로 여전히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함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시 출산율 전망에 혼인율을 활용

[그림 VII-14] 연도별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VII-15] 연도별 혼인건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따라서 혼인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

- 본고에서는 혼인 감소에 따른 신혼부부 규모의 축소와 이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함
 - 혼인이 출생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여성의 혼인상태 비율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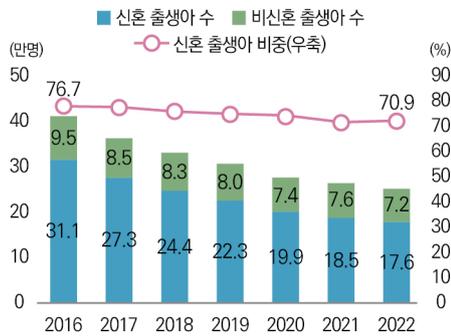
21) 이철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 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석", 경제학연

- 하지만, 전체 출산의 약 70%가 혼인한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²²⁾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급격한 혼인 감소로 인해 2022년 신혼부부 수 또한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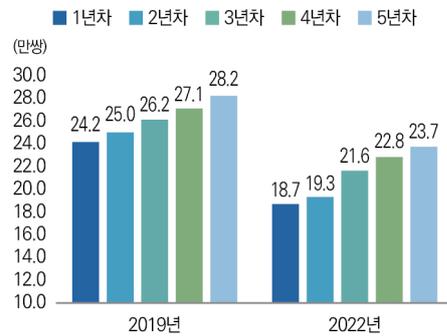
- 2019년 23.9만건이었던 혼인은 코로나19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1년 19.3만건으로 감소
- 혼인감소의 결과로 2019년 130.7만쌍 수준이었던 신혼부부 수는 2022년 106.2만쌍으로 감소
 - 신혼부부 수는 연앙(7월1일) 기준이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바탕으로 자체 추정한 수치로, 사망 및 국외이동은 고려하지 않음²³⁾
 - 2022년 연간 인구동향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의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통해 2022년 연앙 기준 신혼부부 수 추정

[그림 VII-16] 신혼·비신혼 출생아 수 추이



주: 1. 2022년 출생아 수는 추정치. 2022년 1~11월 누적 출생아 수와 2021년 출산 패턴을 활용하여, 2022년 총 출생아 수 및 신혼 출생아 수를 자체 추정하였음
 2. 신혼부부는 혼인한지 5년 미만인 부부를 의미
 3. 비신혼 출생아 수는 신혼이 아닌 부부의 출생과 비혼부모 출생을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그림 VII-17]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주: 1.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바탕으로 자체 추정 수치이며, 사망 및 국외이동은 고려하지 않음
 2. 연앙(7월1일)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구, 2018, 66.3: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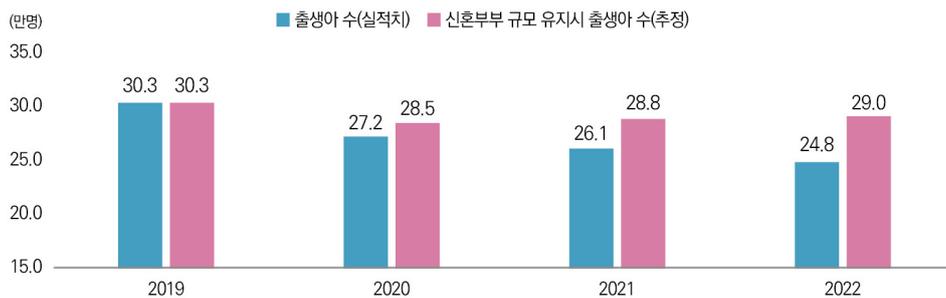
22) 본 연구에서는 혼인신고를 한지 5년 미만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였음

23) 추정방법이나 기준 시점 등에서 통계청이 제공하는 신혼부부통계의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출생아 수 감소는 혼인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4.8만명으로 추정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0.3만명 대비 약 5.5만명 감소
 - 2022년 1~11월의 누적 출생아 수와 2021년의 월별 출생 패턴을 활용하여 2022년 연간 출생아 수를 추정함
- 혼인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간 출생아 수 감소(5.5만명) 중 약 77%(4.2만명)가 신혼부부 규모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²⁴⁾
 -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혼인 감소의 영향 분석
 - 가상적 시나리오 하에서 2022년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2만명 많은 29.0만명이 되었을 것으로 나타남
 - 위 결과는 2019년 이후 신혼부부의 감소로 인해 2022년 출생아 수가 약 4.2만명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신혼부부의 출산율²⁵⁾은 2019년 0.170명에서 2020~2021년 0.161명으로 하락한 후, 2022년 0.166명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
 - 2012년 0.239명이었던 신혼부부 출산율은 2019년 0.170명으로 하락하여 2010년대 중후반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019년 이후 하락세가 정체

[그림 VII-18] 신혼부부 규모 유지시 출생아 수 추정



주: 1. 신혼부부 규모 유지시 출생아 수는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출생아 수를 의미

2. 실적치 중 2022년의 값은 1~11월 누적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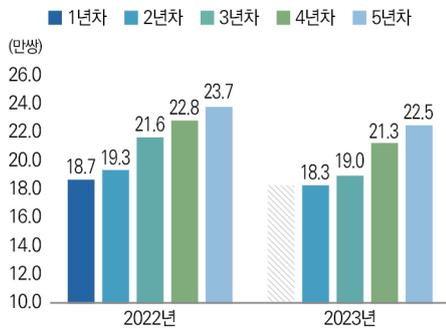
24) 분석 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BOX 18] 참조

25) 신혼부부 출산율은 '신혼부부 한쌍당 평균 출생아수'로 정의

□ 최근 혼인 감소세를 고려할 때, 향후 출생아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023년의 신혼부부 규모는 2022년도 신혼부부 규모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음
- 2023년 2~5년차 신혼부부의 수는 81.0만쌍으로 2022년(87.6만쌍) 대비 약 6.6만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의 n년차 신혼부부 수를 바탕으로 2023년 n+1년차 신혼부부를 도출하였고, 혼인연차별 이혼율은 202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²⁶⁾
- 또한, 부모 집단의 규모 감소로 인해 2023년 2~5년차 신혼부부의 출생아 수는 2022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혼인연차별 출산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2023년 2~5년차 신혼부부 출생아 수 추정²⁷⁾
- 위 분석의 결과는, 혼인율 또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적을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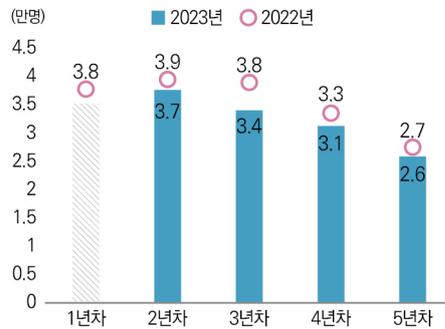
[그림 VII-19]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수



주: 1. 2022년 n년차 신혼부부 수를 바탕으로 2023년 n+1년차 신혼부부 수를 도출하였고, 혼인연차별 이혼율은 202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2023년도 1년차 신혼부부 수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하지 못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그림 VII-20] 혼인연차별 출생아 수



주: 1. 2023년 혼인연차별 출산율은 202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2023년 신혼부부 수를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3년 1년차 신혼부부 출생아 수 또한 도출하지 못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6) 2023년의 1년차(1년 미만) 신혼부부 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도출하지 못함
 27) 1년차 신혼부부 수를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년차 신혼부부의 출생아 수 또한 도출하지 못함

[BOX 18]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이철희(2018)²⁸⁾의 방법론에 기반을 둠

- 이철희(2018)는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 변화를 ‘혼인 여성 비율 변화’와 ‘혼인 여성 출산율 변화’의 영향으로 분해하는 기법을 제시
 - 합계출산율을 도출하는 수식을 혼인 여성과 비혼인 여성으로 분해

$$TFR_t = \sum_{a=15}^{49} (m_t^a f_{m,t}^a + (1 - m_t^a) f_{n,t}^a)$$

TFR은 합계출산율, m은 혼인 여성 비율, f는 출산율을 의미

하첨자 t는 시기, m과 n은 각각 혼인·비혼인 상태를 나타내며, 상첨자 a는 연령을 의미

- 0기의 혼인 여성 비율이 T기까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의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overline{TFR}_T = \sum_{a=15}^{49} (m_0^a f_{m,T}^a + (1 - m_0^a) f_{n,T}^a)$$

- ‘혼인 여성 비율’을 고정시킨 후 구한 가상의 합계출산율과 실제 합계출산율의 차이를 ‘혼인 여성 비율’ 변화로 인한 차이로 해석

$$0\sim T\text{기 혼인 여성 비율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 TFR_T - \overline{TFR}_T$$

- 본 연구는 위의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여 혼인의 변화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합계출산율을 출생아 수로 확장하였고, 혼인 여부를 혼인연차별 신혼부부로 세분화
 - 2019년의 혼인연차별 신혼부부의 규모를 고정시킨 후, 2019~2022년의 실제 혼인연차별 신혼부부 출산율을 적용하여 가상의 신혼부부 출생아 수 도출
 - 도출한 가상 신혼부부 출생아 수에 혼외(신혼이 아닌 부부, 비혼) 출생아 수 실측치를 더하여 시나리오 출생아 수 도출
 - 시나리오 출생아 수와 실제 출생아 수와의 차이를 신혼부부 규모 변화로 인해 발생한 출생아 수 차이로 해석

28) 이철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 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2018, 66.3: 5-42.

다. 혼인 관련 재정지원

□ 혼인 관련 재정지원은 주거지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등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은 총 257개의 과제가 있으며, 이중 신혼부부 지원과제는 주거지원 등이 있음
- 동 시행계획의 2022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 78.9조원 중 주거지원은 23.7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0%이며 이중 신혼부부 관련 과제의 예산은 16.7조원²⁹⁾
 - 해당 과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와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임
 - 예산 소요 과제는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중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27,140억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45,068억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지원) 95,300억원임
 - 이 중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별도예산 책정없이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단위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2021년 기준 약 58.6%가 신혼부부(4.5만가구)에 지원
- 청년 지원 사업들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결혼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42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310억원), 청년저축계좌(890억원)등은 취업애로 청년의 고용 및 자산형성을 지원

[표 VII-5] 정책분야별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

(단위: 억원)

계	가족 ¹⁾	노인 ¹⁾	주거	고용	교육	보건	기타
788,348	192,444	200,392	237,087	83,029	38,759	6,852	30,785
100%	24.4%	25.4%	30.0%	10.5%	4.9%	0.9%	3.9%

주: 1) 가족·노인은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분류기준에 따라 예산을 분류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고용 분야 예산으로 분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2022.8

2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 과제명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3개 사업(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의 예산액임

5. 요약 및 시사점

□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혼인 또한 큰 폭 감소

- 2021년 출생아 수는 26.1만명, 혼인건수는 19.3만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만명에서 50년 만에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혼인건수는 1996년 정점(43.5만건)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
 - 특히 코로나19 이후 혼인건수는 연간 10.3%씩 감소하여 출생아 수 감소율 7.2%보다 빠르게 감소
- 국내 출생의 대부분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는 혼인이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

□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하락보다는 혼인 감소에 주로 기인

-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5만명) 중 77%(4.2만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남
 - 혼인의 감소로,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7만쌍에서 2022년 106.2만쌍으로 감소하였으며, 신혼부부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침
- 2019년의 신혼부부 규모가 유지되었다면, 2022년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 약 4.2만명 많은 29.0만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
- 향후 혼인 감소가 지속된다면, 출생아 수 감소 또한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저출산 극복 정책에 있어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요인을 보완할 필요

- 결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에 혼인요인을 고려할 필요
 - 혼인 감소는 젊은 층의 1인가구 증가로 이어지고, 1인가구의 증가는 자산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시 혼인 확률을 낮추는 순환 고리 형성 가능
- 정부는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제도 및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음
 -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가정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1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27-00199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